

독일 통일 전후의 동독 여성 및 어머니의 정신 사회적 문제*

울리케 게데온

할레 디아코니병원 정신치료 및 정신신체의학과

직업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구동독에서 여성과 가정의 주도적 상이었고 구동독 여성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전업주부로” 또는 아이 없는 싱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동독에는 서독과 같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하느라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없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사회화는 법규범으로 정해진 특정 모범을 따르는 것이었다. 학교의무, 교육의무 및 학습의무 등이 그것이었다.

구동독에서 젊은 여성들은 학교 졸업 후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여성으로서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능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교 성적과 정치적 관점이었다. 이들 요소를 통해 직업교육 또는 대학교육을 선택하거나 입학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직업교육을 마친 후 젊은 여성들은 어렵지 않게 직장을 얻을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늦어도 25세까지 결혼과 임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 2007년 4월 18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후원한 한독 학술 심포지엄 “통일, 그 인간과 제도의 드라마”에서 발표된 원고.

평균적으로 구동독 여성들은 약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나서 대략 21-22세에 결혼한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를 가졌다.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의무사항이었고 출산은 반드시 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출산 후 어머니와 아이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출산여성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정부는 사회복지원을 보내 출산여성의 양육상태를 평가하고 1세 이상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탁아소 신청서를 전달하였다.

출산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탁아소에 보냈으며, 이는 사회적 규범에 속했다. 일반적으로 2-3년이 지나면 둘째 아이를 가졌다. 둘째를 임신하면 다시 1년을 집에서 보내는데 이때 큰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 아이는 탁아소로 보내진다.

구동독의 출산 및 결혼 비율은 서독에 비해 약 20% 정도 더 높았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92%)이 1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 이는 특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과 가정을 위한 인구정책적 지원체계가 광범위하게 발전했던 덕분이었다. 젊은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금전적 비용은 국가에서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구동독에서 아이들을 국립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저렴했다. 탁아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던 것과, 출산 후 실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구동독 여성들에게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다. 출산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구동독은 92%의 여성을 성공적으로 경제활동 영역에 통합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서독에서는 직장 여성의 비율이 전체 여성의 40%밖에 안 되었다.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구동독의 경우 5%에 그쳤으나 서독의 경우 30%에 달했다.

사회적 및 재정적 혜택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주거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과 자녀출산은 부모를 떠나 자기 집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도 했다. 이

에 따라 구동독에서는 여성의 약 70%가 25세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혼인을 하면 젊은 부부는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대출받은 금액의 상당부분을 면제받았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녀 출산 시 젊은 부부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국가에서 받았다. 매월 받는 자녀수당은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두 배로 늘어났다(첫째 자녀: 50 마르크, 둘째 자녀: 100마르크, 셋째 자녀: 200마르크). 상근직 근무 여성들은 매월 하루 유급 월차를 받아 가사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자녀 2인 이상의 직장여성은 일반적 근로시간이 43.5시간일 때 40시간만 일하면 되었고 자녀 당 1일의 유급 휴가를 더 낼 수 있었다.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외에도 직업적 및 사회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도덕적, 경제적 압박도 없지 않았다. 먼저 이러한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직종이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것, 성을 불문하고 동일 근로에 동일 임금을 지불할 것을 법으로 규정했던 것 등이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능력 촉진 정책, 탁아소, 유치원 및 방과 후 보육원 확보, 서비스센터 설립 및 기타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사회적 혜택이 부여되었다. 경제적 압박은 구동독에서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리려면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임금구조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노동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에서 이를 선전함으로써 여성들은 일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을 받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중단하거나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거부되었다. 여성의 평등권은 직장생활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출산 자녀가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오래 중단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주었다. 가정 경제가 일반적으로 맞벌이 구조를 띄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가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교육이 사

회 기관으로 옮겨가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였다.

특히 탁아소 등 기관에서 보육되는 영유아(0-3세)의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거의 100%에 달했다. 유치원은 전체 아이들의 94%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고, 방과 후 아이들 보육(Hort)은 전체 학생의 82%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제공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구서독의 경우 탁아소 공급은 2%에 그쳤으며 유치원은 78%, 방과 후 보육시설은 연령 별로 4%에 그쳤다.

보육시설의 개방 시간은 6시 - 19시였으며, 그 밖에도 주말탁아소가 있어서 이 곳에 영유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길 수 있었다. 구동독에서 많은 아이들은 10시간 이상을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보냈다.

구동독 언론은 탁아소 및 유치원에 대한 여론 보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그 의미와 기능을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하여 자녀 보육이 노동시장보다 더 하위에 온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힘썼다.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도 자신들이 내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 아이에 대한 미안함 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1989년 동서독 통일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신연방주(구동독)의 여성들에게 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통일 독일은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복지국가였으며, 지금까지 구동독 여성들이 받았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 구동독 시절에는 당연했던 직장여성 및 출산한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폐지되거나 서독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낮은 임금의 노동조건에도 감지덕지해야 하거나 원하지 않은 시간제 근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더 잦았다. 여성 실업률이 더 높고 실업기간도 길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16세 - 65세인 여성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동독 지역에서 77%에서 73%로 줄어들었고,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출산 여성의 경우 83%에서 64%로 떨어졌다. 시간제 근로 또는 소규모 근로 비율은 동일한 기간 동안 17%에서 29%로 늘어났다.

서독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6%인데 비해 구동독 여성의 경우 최소한 1/3이 원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모두 상근직을 원했다. 통일 이후 여성의 해고율이 남성 보다 더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육아휴직 후 재고용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장기실업자 중 여성이 54%를 차지하여 다수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에는 구동독 실업자의 3분의 2(64%)가 여성이었다.

또한 직업전환교육과 같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1989년 당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여성 중 1994년에도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58%에 불과했으며, 이에 반해 남성은 70%에 달했다.

거의 위기라 할만한 노동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탁아소 등 각종 사회정책적 지원책이 축소되면서 동독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은 열악해졌다. 특히 취업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은 자녀가 없는 젊은 여성,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그리고 특히 독신모(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였는데, 고용주들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들 여성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근로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기할 점은 신연방주의 경우 구연방주에 비해 독신모의 비율이 4분의 1 더 높았는데, 이는 독신모가 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독에서 독신모들은 사회적 문제계층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독신모는 통일 후 실업과 빈곤의 타격을 특히 극심하게 받았다.

구동독 시절 크게 발전되어 있었던 보육시설 공급 상황은 통일 후 변화를 겪게 되

었다. 신연방주에서 국가가 운영했던 탁아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로 넘긴 것이었다. 신연방주는 전반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탁아기관 지원을 충분히 할 여력이 되지 못해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탁아 및 보육 시설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탁아 및 보육 시설 비용이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연령별 탁아 및 보육시설 공급 현황은 신연방주가 구연방주보다 훨씬 더 높다.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 여성들의 직업활동 및 직업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직장은 서로 병행할 수 있다는 구동독 시절의 신념이 동독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독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서독 여성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동독여성 73%, 서독여성 65%). 또한 부부가 모두 상근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정의 비율도 서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동독 37%, 서독 18%).

통일 후 구동독 양성평등정책과 비교할 때 극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교육상황이다. 직업교육 실습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쟁상황에서 밀려나는 것은 주로 여학생들이었고, 대학입학 기회도 더 적었다. 이에 따라 대학신입생의 여학생 비율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57%에서 53%로 줄어들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89년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89년과 1990년 사이의 전환기 경우를 보면 직장 여성 중 육아휴직을 낸 여성이 18만 명에 달했으나, 1991년에는 7만 명에

그쳐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출산 여성이 육아휴직 후 과거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1989년 이후 동독 여성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진보적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지원책 축소, 구동독 경제 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시장 위기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은 동독에서 현대적인 성 개념으로 굳게 자리잡았으며,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회복지 구조는 서독 복지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다. 탁아 및 보육기관과 전일제 학교의 증대, 양육휴가, 부모수당, 보육휴가, 고용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학업 중인 출산 여성에 대한 특별 지원, 직업여성 지원, 전반적인 가정과 직업의 병행 촉진 등을 주제로 하는 공개토론의 배경에는 - 대부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 구동독 시절 이미 다른 맥락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관점과 규칙 및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환기 전후의 동독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어떤 사회체제가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더 적합한 체제인지 자문해본 적이 있다. 전환기 전후의 시기를 출산 여성의 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 대답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동독 여성들은 직업세계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재정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되지 않았으며, 독신모이건 아니건 관계 없이 출산 여성으로서 불편함 없는 삶을 영위하고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결(自決)의 의미에서는 사회규범이 정한 엄청난

집단주의의 압박을 받았으며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야 하는 등 제약이 없지 않았다. 아이의 육구 충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규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은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를 하루 8시간 이상 낮선 보육사의 손에 맡겨야만 했고 이로 인해 아이에게 항상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생후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떨어져 지낼 경우 아이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생후 36개월 동안 자존감, 애착관계, 정체성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특성의 형성 및 발전에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유치원 연령이 되어야 비로소 발달심리 차원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 새로운 경험분야를 접하게 해줄 필요성이 생긴다.

구동독 여성들은 전환기 이후 여행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보다 나은 소비생활 및 기타 상업적 혜택과 같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된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독립적 여성, 기혼 여성 및 출산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

직접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출산 여성으로서 당연한 지원을 받으며 직장생활에서도 인정 받았던 구동독 여성들의 자부심은 전환기 이후 심한 타격을 받았다.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많은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자부심이 손상된 상태라 사료된다.

일반 직업여성을 비롯해 혼인과 출산을 한 직업여성들의 특별한 생활능력, 직업과 육아의 균형잡기 능력 등을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정책적 지원법을 마련하여 일차적으로 탁아소와 같은 시설 공급을 늘리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생후 36개월간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대한 재정적 보상, 출산과 육아 이후 적절한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 제공, 또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가정친화적 근로시간 구성 등 직장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구동독이나 현재의 독일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욱 가정 친화적인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 Geißler, Rainer (2006):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4. Auflage 2006
- Niephaus, Yasemin (2003): Der Geburteneinbruch in
Ostdeutschland nach 1990
Leske + Budrich, Opladen, 2003
- Lost, Chr.; Oberhuemer, P.
(Hrsg.), Auch Kinder sind Bürger –
Kindergarten- und Kinderpolitik in
Deutschland, Jahrbuch 4, Pestalozzi-
Fröbel-Verband (PFV)
- Zeiber, Helga (1996): Kinder in der Gesellschaft und
Kindheit in der Soziologie.
In: Zeitschrift für
Sozialisationsforschung und
Erziehungssoziologie, 16, 1996

자료 출처: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Familien und Familienpolitik im geeinigten Deutschland

- Zukunft des Humanvermögens
- Fünfter Familienbericht – 15. Juni 1994

Familien- und Lebensformen von Frauen und Männer

Von Dr. Ulrike Heß-Meining und Dr. Angelika Tölke, 2000,

veröffentlicht unter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

Frauen- und Familienpolitik der DDR aus

http://de.wikipedia.org/wiki/Frauen-_und_Familienpolitik_der_DDR

Kindertagesbetreuung in West- und Ostdeutschland

Statistisches Bundesamt, 2004, veröffentlicht unter

<http://www.destatis.de/presse/deutsch/pm2004/p1230082.htm>